

광주시 출연기관 채용 잇단 '잡음'

광주시 출연기관들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면서 어수선 행정과 품수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18일, 2017년 하반기 '제창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약직 센터장 채용공고를 냈다. 센터장은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 교육생을 모집·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책임지게 되며, 월보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300만원이다.

진흥원은 원서접수(27~31일), 서류전형(8월1일), 면접시험(8월2일)을 거쳐 새로운 센터장을 영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용 공고는 불과 1시간 만에 채용 취소 공고로 바뀌었다.

'박근혜 재판' 등 공익 사건 판결 생중계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글을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판 회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법판 회의는 지난 20일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스

광주경진원, 채용공고 1시간만에 취소공고 광주신보, 기간제 비정규직 돌려쓰기 뒤탈

'인사운용상 내부 사정으로 추후 재공고하겠다'는 간략한 입장이 덧붙여졌다.

진흥원은 1차 추경에 하반기 사업비 5000만원이 확정·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철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부랴부랴 취소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구 원장은 "연속사업이고 성과가 좋아 하반기에도 이어갈 예정인데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면 안될 거 같아 다소 조급하게 일처리를 하다가 업무상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또 다른 출연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근로기간 2년을 넘긴 계약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비정규직 돌려쓰기'를 시도하다 안팎으로 반발이 일자 채용공고를 취소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새정부 고용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샀다.

재단 측은 6월에 2명, 7월에 3명의 계약직원들의 채용기간이 만료되자 2년 이내 근무기간으로 계약직 비정규직원들을 다시 뽑을 예정이었다. 2년 간 근무해온 기간제 계약직들을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또 다시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를 뽑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6월에 만료되는 계약직 2명의 경우 실제로는 지난 3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메꾸기 위해 3개월만 연장하는 이른바 '조끼기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계약직 연속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긴 만큼 정규직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나오면서 재단측은 신규 계약직 채용 공고를 취소하고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뒤늦게 전환했다.

재단 측은 "업무는 많고 인력은 부족해 연장계약에 이어 신규 채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한 때 34도까지 오르며 맑은 날씨를 보인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맑은 하늘이 구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U대회 선수촌 임대료 소송 장기화

광주시·조합 모두 항소

2년 5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이 광주시와 조합 측 모두 항소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양 측은 각각 지난 14일과 17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양 측은 선수촌 사용에 따른 입주 지원 기간과 지급 대상 범위, 이자비용 지급과 선수촌 사용 임대료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년 5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29일 '입주 지원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와 화

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83억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감정가를 바탕으로 443억원을 요구한 조합과 28억원을 제시했던 광주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2445가구만 선수촌으로 사용했지만 전체 3726가구가 입주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시에 인계한 2015년 4월28일부터 입주 준비가 마무리된 지난해 3월31일까지 11개월을 입주 지원 기간으로 판단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은 입주 지원에 따른 분양 대금 미납액(잔금 30%)의 이지만 인정하면서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주시는 항소장에서 '금융비용 지급 대상은 선수촌으로 사용한 2445세대, 입주 지원 기간은 아파

트를 인계받아 다시 인도한 2015년 8월31일까지'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선수들이 실제 입주해 사용한 2400가구의 문제로 봤다. 선수촌이 실제 사용된 4개월 동안의 금융이자를 내면 된다는 게 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 측은 선수촌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지급하고, 중도금(70%)과 잔금(30%)을 모두 포함한 총 분양가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지 조합장은 "대회 기간 임주를 하지 못하고 3726가구가 다른 곳에서 11개월간 별도의 주거비를 부담했다. 선수촌 사용으로 입주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금액이다. 오히려 그 기간 임대료를 내준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임대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춘정 기자

日서 50대 여성 고양이에게 물려 SFTS로 사망

일본의 50대 여성 한 명이 고양이로부터 전파된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포유류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진드기 매개 질병 사례로는 세계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여성이 지난해 허약해 보이는 길고양이를 도와주려다 고양이에게 물렸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그로부터 열흘 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증세로 숨졌다. SFTS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걸리는 질병이다.

그러나 숨진 여성에게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여성이 진드기에 감염된 고양이에게 의해 병이 전파된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SFTS는 비교적 새로운 감염병으로 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치사율은 최고 30%에 달하며 특히 50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SFTS가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여성의 사망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쇠약해 보이는 동물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드기에 물리면 리임병을 일으켜 치료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계속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의회에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도 요청했다.

25일 현지매체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정연설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마약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마약의 뿌리는 매우 악랄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국인의 투자를 막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두시간 동안 계속된 연설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한 지역과 국제 인권 단체에 굴복하지 않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과 국제 인권단체의 압력에도 마약과의 싸움은 절대 멈출 수 없다"며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은 감옥이거나 자폭이기 때문에 그들이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의회에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필리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죽음으로 이를 되갚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30일 두테르테 취임과 동시에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경찰은 약 3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0명 이상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사망했다.

인권단체들은 많은 사망자들이 정부와 관련된 자경단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서 탈레반 자폭테러로 26명 사망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에서 24일 자살폭탄 테러범 한 명이 경찰탑 인근에서 자폭, 26명이 숨지고 54명이 부상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경찰관들이다.

불법 단체로 규정된 탈레반 관련 단체인 테릭-탈레반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고위 경찰 하이데르 이슈라프는 오토바이를 탄 자살폭탄테러범이 라호르 외곽 코트 라크와 아체시지의 철거를 자취하던 경찰들을 겨냥해 폭탄을 터트렸다고 밝혔다.

이슈라프는 부상한 54명 역시 대부분 경찰관이며 행인 몇 명도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발 현장 인근에 중요한 정보기술 관련 회사들이 있었지만 폭발은 경찰관들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릭-탈레반은 자신들이 자폭테러범을 오토바이에 태워 사건 현장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라호르가 주도인 편집주의 나라 사나울라 내무장관은 편집주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사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명분을 주장하든 그들은 테러리스트일 뿐이며 파키스탄을 무너트릴 수 없다고 말했다. 말릭 모하메드 아흐메드 편집주 대변인은 폭발이 사바즈 사리프 주총리 공판 인근에서 일어났지만 사리프 주총리는 당시 공판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